

南北韓 統一政策의 論理構造 比較： 「民族成員 모두의 繁榮」과 「階級鬭爭」의 對決**

李 相 禹*

I. 序 論

II. 分斷國 再統一의 問題

III. 南北韓 統一政策의 基本性格

IV. 南北韓 統一政策의 相異點

V. 南北韓 統一政策의 評價

I. 序 論

統一의 熱氣가 높아지면서 統一의 意味가 모호해지고 있다. 「무슨 統一이든 統一은 善」이라는 目的超越의인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統一을 왜 원하는가? 나와 民族社會의 發展과 繁榮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즉 모두가 統一이 가져올 狀態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民族社會像」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統一은 곧 自己理念實踐의 수단과 條件일 뿐이다. 그런 뜻에서 統一은 理念의 표현이며 “統一을 원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統一을 원한다”는 말이 된다. 統一문제에서 理念을 超越한다는 것은 자기 속셈을 숨기는 欺瞞이거나 統一에 담겨진 理念的 要素를 전혀 이해 못하는 無知일 뿐이다. 統一問題의 本質인 理念과 思想問題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統一주장은 統一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모든 統一이 善이 될 수 없다. 오직 民族社會발전 조건을 충족하는 統一만이 善이다. 그리고 그 善의 판단은 자기 理念에 비추어서만 얻어진다. 北韓은 “自由民主主義統

* 西江大學校 政治外交學科 教授

** 이 論文은 1987年度 文教部 研究費支援을 받아 作成한 것이며 李相禹 編, 「統一韓國의 摸索」(博英社, 1987)에 初稿一部가 실렸음.

一”을 받아줄 것인가? 우리가 “共產統一”을 수락하겠는가? 統一은 理想 실현의 과정과 수단이지 그 자체가 目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民族社會가 분단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韓國과 北韓은 모두 民族統一을 최대의 「民族的 課題」 또는 最上の 「國家政策」으로 선언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政策을 세워 제각기 추진하여 왔다. 韓國과 北韓의 統一政策은 지난 40여년 동안 달라져 가는 內外與件에 맞추어 끊임없이 修正・補完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平行線을 달려왔을 뿐 그 내용에서 접근된 흔적이 별로 없다. 하나의 民族社會를 놓고 다 같이 統一을 주장하면서도 政策內容이 접근할 수 없었다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個人的 自由와 繁榮을 「民族社會 全體의 번영」이라는 관념상의 존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自由民主主義의 政治理念을 추구하는 韓國과, 인간을 「類的 存在」로 인식하고 共同體의 自主性과 繁榮을 구성원 개개인의 自由・福祉보다 더 우선시키는 共產全體主義 理念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北韓 당국간에는 추구하는 理念의 내용상의 相克性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一方이 統一을 위해 理念을 희생하든가 아니면 修正하기 전에는 統一政策에서 南北韓이 合意點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大韓民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 代表하는 理念은 서로 相克的이며 이에 따라 추구하는 統一의 目的이 相反되는데 어느 一方이 자기 目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合意에 의한 統一은 論理的으로 不可能하다. 만일 合意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느 一方이 자기의 目的을 감춘 戰術的 合意以上이 될 수 없다.

만일 北韓의 統一論을 수용하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大韓民國의 存在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되며 반대로 韓國의 統一論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존재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따라서 統一은 南北韓 어느 一方 또는 兩方에서 革命的變化가 일어나서 兩方간에 思想的 相應性이 높아지게 될 때에 가능해질 수 있을 뿐이다.

統一은 不可能하다고 포기해야하는가? 아니다. 統一은 우리의 念願이

이루어지는 最後의 단계이며 거기에 이르는 過程은 복잡하고도 긴 旅程이다. “分斷의 管理”를 현명하게 하여 念願하는 統一로 접근해야 한다. 分斷의 苦痛을 줄이며 統一의 先行條件들을 줄여나가는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統一을 이룰 수 있다. 바른 “分斷管理”를 위해서도 南北韓의 統一論理의 핵심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韓國과 北韓의 統一政策에 대한 分析·解說·比較研究 등은 많았으나 두 政策이 조화될 수 없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흔하지 않았으며 政策의 구체적 發願으로서의 여러 提議內容간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南北韓間 統一政策의 差는 政治理念의 차이가 그 淵源이므로 각각의 統一政策 體系 내에서 추구하는 政治理念의 價値定向으로부터 구체적 統一政策 提議까지 연결되는 論理的 連繫를 정리·비교하는 것이 두 統一政策의 核心的 差를 부각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II. 分斷國 再統一의 問題

1. 分斷國 再統一의 意味

1) 統一의 定義

南北韓間에 논의되는 統一問題는 엄격히 말하면 分斷國의 再統一問題이다. 단순한 『두 개 이상의 國家社會 단위가 하나의 國家社會 단위로 統合』되는 일반적인 國家統合(integration)의 문제가 아니다. 統一이 아닌 再統一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은 統合對象이 되는 國家社會 단위 또는 기타 社會 단위간에 統一社會를 이루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統一對象 단위도 分斷國이라고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다. 分斷國이란 『하나의 國家社會로 존재하여 왔던 역사를 가진 두 개 이상의 독립된 國家社會』를 의미한다. 分斷의 이유가 그 社會內的 갈등의 격화였든지(中國의 예) 外部勢力에 의한 강제분할이었든지에(독일

과 韓國의 예) 관계 없이 국민들의 意識과 國家權力構造에서 하나의 단위를 유지했던 나라가 현재 두 개 이상의 독립된 國家權力體制를 영위하고 있으면 分斷國이라 할 수 있다.

再統一의 뜻에 있어서 어떤 상태가 되면 統一이 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여러說이 있으나¹⁾ 대체로 『두 개 이상의 主權的 行爲主體가 하나의 行爲主體者로 된 狀態』²⁾라는 형식적 정의와, 『一定 領域內의 人間集團內에서 개개인간의 利害와 見解差異를 平和的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變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共同體意識(sense of community)이 구성원

- 1) 國家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을 다루는 여러 학자들의 「統合」에 대한 定義에 대해서는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第1輯, (서울: 書香閣, 1977)의 第35章 「機能主義 統合理論과 南北韓 關係改善方案」 pp. 545~596을 볼 것. 대표적인 定義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Ernst Haas: ".....a process whereby political actors in several distinct national settings are persuaded to shift their loyalties, expecta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toward a new centre, whose institutions possess or demand jurisdiction over the pre-existing national state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p. 16. ② Amitai Etzioni: ".....a political community which possesses effective control over the use of the means of violence is integrated. Such a community has a center of decision-making that allocate resources and rewards throughout the community and forms the dominant focus of political identification for the large majority of politically aware citizens." *Political Unification* (New York: Holt-Rinehart & Winston, 1965) p. 4. ③ Leon N. Lindberg: "the process whereby nations forgo the desire and ability to conduct foreign and key domestic policies independently of each other, seeking instead to make joint decisions or to deleg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new central organs and the process whereby political actors in several distinct settings are persuaded to shift their expecta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to a new center." *The Political Dynamic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 6. ④ Karl W. Deutsch: ".....a condition in which a group of people have attained within a territory a sense of community and of institutions and practices strong and widespread enough to assure, for a long time, dependable expectations of peaceful change among its population."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 5.
- 2)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 1968, p. 377 참조.

들간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機構가 制度化되어 있는 狀態』(Deutsch 定義의 補充)라는 다소 복잡한 定義로 統一狀態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統一의 의미는 統一에 거는 기대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社會間的 統合에도 여러 국면이 있고 또한 각 국면의 統合의 정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³⁾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統合되면 統一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南北韓社會를 갈라놓은 것이 政治였고, 따라서 政治統合이 이루어져야 「平均의 韓國人」들은 統一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한 그 정도에서도 적어도 單一主權을 행사할 수 있는 機關統合이 이루어져야 統一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태를 「統一된 狀態」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韓半島內에는 主權을 가진 國家가 하나만이 存在해야 한다. 外部世界에 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도 하나여야 하고, 國內에서도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政府가 하나여야 한다(單一主權國家).

둘째, 韓半島內에 居住하는 사람(外國國籍保有者 제외)은 모두 하나의 국민을 형성하고 主權行使에 있어서도 居住地域에 관계 없이 동일한 權限을 가져야 한다(國民統合).

셋째, 모든 국민은 全領土內에 걸쳐 居住移轉 및 通行의 自由를 가져야 한다(生活空間의 統合).

넷째, 統一된 국가는 單一法體系와 單一軍隊를 보유하여야 한다(法秩序와 軍隊統合).

이러한 상태에 못미치는 形式的 統一, 예를 들면 名目上的 統一은 法形

3) Joseph S. Nye는 地域統合의 類型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經濟的 統合(economic integration), 社會的 統合(social integration), 政治的 統合(political integration), 機關統合(institutional integration), 政策統合(policy integration), 態度統合(attitudinal integration), 安全共同體(security community). 그의 책, *Peace in Parts*(Boston: Little, Brown & Co., 1971) pp. 24~54를 볼 것.

式으로는 統一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 韓國民族成員들이 통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소한 單一主權國家 형성과 生活空間의 統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형식의 통일일지라도 韓國人은 統一이라고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統一은 결국 國民의 認識次元에서 하나의 生活單位를 이루었다고 믿게 되고, 또한 全領域에 걸쳐 하나의 國家體制가 형성되게 되어야 이루어지는 狀態라 할 수 있다.

2) 民族共同體認識

韓民族社會는 특이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血緣집단으로 이루어진 民族이 하나의 國家를 이루며 하나의 統一된 생활공간속에서 하나의 共同體를 이루고 1千년이상 살아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속에서 平均의 한국인의 意識속에는 國家와 民族이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하나의 民族共同體라는 현실적인 민족생활공간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意識에서 원래 국가의 뜻을 가졌던 “나라”라는 개념은 意識次元에서는 “民族共同體”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라고 말할 때는 國家보다도 韓民族社會를 의미하게 되었다.

統一문제인식에 있어서 이러한 韓國人들의 普遍的認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나라의 統一”이라는 民族的 念願도 따지고 보면 國家統一 이전의 民族共同體의 單一性회복에 대한 念願이며 統一의 열망도 外形的인 政治統一보다도 실질적인 生活共同體의 단일성회복에 대한 열망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認識의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統一문제에 대한 바른 접근이 어려워진다. 統一을 갈망하는 韓國人들의 一次的인 심정적 動機는 “分斷의 아픔”인데 이 分斷의 아픔은 離散의 아픔, 自由왕래거부의 아픔, 함께 살지 못하는 아픔등의 情感的인 것이고 그것은 共同體分斷에 대한 怨이지 政治的으로 두개의 政府가 존재한다는데 대한 怨은 아니다.

이러한 韓國人들의 民族共同體의 귀속감은 再統一의 課題설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한다. 즉 현재의 民族共同體의 分斷狀態를 그대로 둔채 形式的으로 統一政府의 명칭을 창조한다고 해서 統一의 熱望은 充足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統一熱望은 形式的 統一이 유보되더라도 현실적인 民族共同體의 단일성이 회복되면 一次的으로는 充足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統一의 노력방향도 自明해진다. 우선 南北韓을 자유롭게 다니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살 수 있는 “社會的으로 統合된 단일 共同體”를 이루어야하고 南北韓간에 재화가 自由롭게 이동될 수 있는 “經濟的으로 통합된 단일 經濟共同體”를 이루어야 하고 같은 말을 쓰며 같은 文化를 나누어가지는 “文化的으로 통합된 단일 文化共同體”를 이루어야 한다.

많은 韓國人들이 統一을 논할 때, 表現은 “政治統一”일지라도 意識속에서는 “共同體의 單一性회복”이라는 점을 留意하지 않고는 統一문제에 대한 바른 접근이 어렵다고 본다.

2. 分斷國 再統一의 先決條件

分斷國의 再統一에 있어서는 分斷國 아닌 國家統合에서 보다는 住民의 統合意思 등에서 유리하지만 分斷過程에서 생긴 敵對感 등으로 불리해 질 수도 있다. 分斷國 再統一의 일반적인 先決要件을 政治統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南北韓간의 관계에 代入하여 어느 정도 이러한 條件이 갖추어졌으며 또한 어떤 조건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 갈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論議에서는 제이콥(Philip E. Jacob)교수가 제시하는 「政治統合 先決要件 10項」을 評價기준으로 택하였다.⁴⁾

1) 地理的 隣接性(proximity)

- 4) Philip E. Jacob &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hilip E. Jacob & James V. Toscano, 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Lippincott, 1964), pp. 1~45를 볼것. 統合 先決要件으로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要件을 제시하고 있으나, Jacob의 項目들이 가장 포괄적이어서 편의상 이를 評價基準으로 택하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社會일수록 통합관계가 쉽게 발전한다는 조건인데, “物理的접촉이 意識의 거리를 좁히는 기조”라는 常識을 생각할 때 극히 당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南北韓은 지리적으로 서로 닿아 있어 이 조건은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이 충족되고 있다. 그리고 이 조건은 不變이다.

2) 同質性(homogeneity)

社會的 同質性이 높으면 높을수록 政治統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어느 수준 이하로 되면 政治統合은 이루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조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社會的 同質性은 所得水準·教育水準·階級 또는 階層·宗教·人種·言語·政治文化·價值定向·國民性 또는 氣質 등 모두를 포함한다.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이 조건을 검토해 본다면 『아직은 높은 水準의 同質性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로 同質性의 수준이 낮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南北韓은 단일사회로서 千年 이상 존재해 왔던 관계로 人種·言語·宗教 등에 있어서는 동일했었다. 그러나 分斷 이후 서로 다른 政治體制下에서 相互交渉 없이 각각 다른 政治敎化를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政治文化·價值定向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이미 보여 주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그 差는 벌어져가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발전 속도와 다른 分配制度 때문에 所得水準·教育水準·階層構造 등에서도 이미 상당한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다만 긴 세월을 내다볼 때 어떤 점에서 다시 닮아가고 어떤 점에서 더 멀어질 것인가는 당장 가늠하기 어렵고, 더구나 「統合의 分水嶺」이하로 언제쯤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뜻에서 이 조건은 앞으로 南北韓間의 政治統合에 있어서 계속 주요 變數로 남을 것이다.

3) 相互交流(transactions)

住民 相互間의 交流가 높을수록 政治統合은 쉬워지며 반대로 交流가 없으면 統合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은 하나의 定說로 되어가고 있다. 交流에는 通信·貿易·人口移動 등이 포함되는데 현재까지 南北韓間에는

이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거의 교류가 없었다. 분단 40 년간에 걸쳐 공식으로는 人的 交流로 1985 년 南北赤十字會談에서의 合意에 따라 南北韓에서 각각 50 명의 이산가족이 1 회 고향방문을 한 것과 예술단의 1 회 교환 공연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1989 년에 극히 제한적인 北韓產品의 수입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현 상황이 統一에 否定的이다. 統一을 원한다면 交流부터 해야 한다는 當爲가 이 조건과 관련하여 생긴다.

4) 認識上的 親和(cognitive proximity)

함께 한 社會를 이루고 살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또한 서로를 가깝게 느껴야 한다는 이 조건에서는 南北韓間에는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離散家族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南北韓住民間에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만큼 서로 가까이 느끼는 인구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南北韓住民은 아직도 서로를 「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分斷 이후 출생 인구가 南北韓人口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리고 다른 社會風土 속에서 서로 교섭 없이 다른 政治敎化를 받고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이 조건도 쉽게 충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조건도 그런 뜻에서 「常數」로 보기보다는 「變數」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機能的 利害의 共通性(functional interest)

통합대상인 두 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利益・關心사항이 있을 때 쉽게 협조하게 되며 나아가서 政治統合을 촉진하게 된다는 조건인데, 南北韓關係에서는 현재 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잠재적 共通利害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서로 일체의 교섭이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利害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 물론 현단계에서는 「不確實」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 共同體의 性格 또는 氣質(communal character)

두 사회의 지배적인 生活感情・價值定向・行爲樣式이 비슷하고 相容的

이면 統合에 順機能의으로 작용한다는 조건이다. 南北韓間에는 分斷以後의 생활여건 변화로 이제 이 점에서 어느 정도의 類似性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南北韓社會가 모두 급속히 產業化되어 가고 있고, 產業化社會에서의 일반인이 가지게 되는 氣質에는 공통성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南北韓間에 共同體氣質의 相似性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역시 주요 變數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7) 權力構造(structural frame)

統合對象社會 또는 共同體內的 意思形成・權力配分 등과 관련된 構造的 틀이 서로 다르면 統合에 지장을 준다는 조건이다. 南北韓社會間에는 이 조건에서는 統合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民衆參與가 거의 배제된 1人 1黨 支配의 全體主義 權力構造를 가진 北韓社會와 광범위한 民主參與를 허용하는 民主的 權力構造를 가진 韓國社會와는 構造面에서 相克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건의 검토에서는 現存體制보다는 現存體制的 발전방향을 통제하는 이념상의 差 때문에 더욱 그 相克性은 높아진다. 北韓의 「主體思想」은 人民獨裁와 黨의 絕對性, 그리고 指導者에의 劃一的 복종을 理想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韓國의 지배적 政治理念인 自由民主主義 이데올로기는 價値의 相對性을 앞세워 더 철저한 多元主義的 政治制度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8) 自主-從屬의 地位(sovereignty-dependency status)

統合은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복속시키는 경우가 아닌 限 자기의 自主性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국가통합에서는 스스로의 自由權을 잠식하는 통합을 꺼려하는 것이 通例이며, 높은 自主權을 누리고 있는 나라일수록 統合에 消極的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반대로 어떤 형태이든 현재 다른 나라에 從屬되어 있는 나라는 統合運動에 적극적이 된다.

南北韓의 경우, 分斷初期 미국과 소련에 南韓과 北韓이 점령당해 있던

시절에 비해 완전한 主權國家로 된 현재에 와서 統一努力이 사실상 저하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이다.

南北韓關係에서 統一協商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南北韓 모두가 自主權을 가진 主權國家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현상태에서 하나의 單一主權國家로 통합한다는 것은 南北韓 모두 스스로 自主權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조건은 앞으로도 계속 統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9) 政府의 效率性(governmental effectiveness)

政府의 效率性은 국민의 支持와 忠誠心을 확보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忠誠心은 共同體의 內部結束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만일 정부가 效率性을 잃고 국민의 忠誠心을 얻어내지 못하게 되면 國民들은 現政府外의 다른 外部組織體에서 忠誠의 대상을 찾게 된다. 따라서 現政府의 無能은 더 큰 단위의 政府出現을 촉진하는 統合促進條件이 되는 것이다.

南北韓의 경우, 현상태에서는 南北韓政府가 모두 效率性을 가지고 있어 이 차원에서는 統合促進條件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앞으로 하나의 變數로 남을 것이다. 정부의 效率性에는 起伏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北韓政府의 無能은 北韓住民의 統一熱意를 강화시켜줄 것이며, 반대로 韓國政府의 國民支持 상실은 韓國國民의 統一意慾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조건은 統一에 미묘한 영향을 주는 變數가 될 것이다.

10) 歷史的 統合經驗(previous integrative experience)

統合對象인 두 社會가 이전에 統合되었던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統合노력이 성공하기 쉬워진다는 論理이다. 南北韓間에서는 論議할 것도 없는 조건이다. 南北韓은 수천년의 統合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불과 40여년전까지 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검토해 본 열 가지 政治統合 先決條件을 다시 정리하면 南北韓

간에서는 地理的 隣接性 및 歷史的 統合經驗의 두 가지 조건에서는 완벽하게 統一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社會的 同質性, 認識上的 親和, 機能的 利害의 共通性, 共同體氣質, 政府의 效率性 등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變數들로 작용할 것이며 상호교류의 不在, 相異한 權力構造, 南北韓의 自主性 등 세 가지는 계속 統一沮害要素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南北韓關係의 特殊條件

앞에서 分斷國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政治統合條件들을 검토하였는데, 南北韓關係에서는 이상의 一般條件 외에 특수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離散家族 問題

南北韓 分斷은 하나의 生活空間을 둘로 나누었을 뿐 아니라 많은 가족을 분단하여 이른바 離散家族 문제를 낳았다. 특히 韓國戰을 통하여 離散家族數는急增하여 가족 및 친족이 南北으로 離散된 수가 數百萬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러한 離散家族 문제는 統一問題를 단순한 政治問題를 넘어서는 人道主義 문제로 만들고 있다. 離散家族 문제와 失鄉民 문제는 시간이 감에 따라 離散 1世의 死亡으로 점차 그 심각성이 덜해가지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간은 계속 統一熱意를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2) 戰爭에 의한 敵對感

南北韓은 分斷 이후 3년에 걸친 격렬한 戰爭을 치른 경험이 있다. 이 점에서 南北韓 관계는 東西獨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韓國은 1945년에 占領軍에 의해 領土分斷을, 1948년에 政府分斷을, 그리고 1950년에 北韓의 南侵으로 일어난 戰爭을 통하여 民族分斷을 겪었다. 獨逸의 경우, 第三段階의 分斷인 民族分斷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相互間的 敵對感이 거의 없다. 獨逸과 달리 韓國에서는 이 內戰을 통하여 南北韓 주민간에 敵對感이 높아졌으며 특히 韓國國民들에게 北韓政治의 實

相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어 쉽사리 北韓의 政治理念·政治體制를 受容할 수 없는 心理狀態를 조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전쟁후유증은 南北韓間의 타협에 의한 統一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 후유증은 시간에 따라 치유되어 가고 있다. 이미 戰後 出生人口가 전체 인구의 3/4을 넘어서고 있어 전쟁에서 얻은 적개심과 공포심, 北韓 政治에 대한 혐오감 등이 많이 퇴색했지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간은 계속 統一阻害要素로 작용할 것이다.

3) 國際環境要素

논리적으로는 통일문제가 우리 民族內部問題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國際環境要素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받는 國際的 문제이다. 분단 자체가 外勢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美·蘇冷戰의 여파 속에서 國際戰爭의 형태로 南北韓間의 전쟁을 치루었고, 지금도 강대국의 軍事支援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⁵⁾에서 國際環境要素가 統一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南北韓은 모두 주변의 強大國에 비해 劣勢의 國力を 가지고 있어서 주변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수십년간에도 변화하기 어렵다. 南北韓이 美國·蘇聯·中共 및 日本과 對等한 國力を 가질 전망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北韓間의 統一은 주변 강대국의 양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또한 주변 강대국 중 特定國家의 利益에 正面으로 반대되는 형태의 統一로서는 그 나라의 양해를 구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國際環境에는 變化要素가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統一에 대한 國際

5) 北韓은 현재도 中共 및 蘇聯과 軍事同盟을 유지하고 있으며, 韓國은 美國과 軍事同盟을 유지하면서 美軍이 韓國內에 駐屯해 있다. 北韓과 中共간의 條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북경에서, 그리고 北韓과 蘇聯간의 조약은 5월 앞선 1961년 7월 6일에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며 지금까지 유효하다. 韓·美相互防衛條約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 비준·발효되었으며 지금까지 유효하다.

環境與件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國際環境을 무시한 統一努力은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⁶⁾

4. 統一與件 評價基準

앞에서 논의한 統一條件을 중심으로 統一이 가능할 수 있는 與件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統一意志의 存續

統一의 主體는 南北韓에 거주하는 韓民族 社會成員 모두이며, 만일 이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일은 韓民族 全體의 統一意志가 전제가 될 때만이 論議되고 추진될 수 있다.

統一을 갈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韓國內 프롤레타리아 階級的 해방을 목적으로 統一을 원하는 北韓共產集團 등 특수집단의 통일이유를 제외하고 「平均的 韓民族 社會構成員」의 統一意志의 源泉을 분석해 본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分斷의 고통 제거를 들 수 있다. 離散家族의 再結合·失鄉民의 歸鄉 등 分斷으로 생겨난 고통을 없애기 위해 統一을 원하는 점이다.

둘째, 南北韓 대결의 고통을 덜자는 이유가 있다. 끊임없는 戰爭의 공포에서의 해방, 對決지속을 위한 物資와 努力의 낭비, 國際社會에서의 불편함 등을 덜자는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셋째, 民族愛·同胞愛를 들 수 있다. 南韓住民의 입장에서 보면 北韓居住 同胞가 남이 될 수 없는 같은 民族社會成員인데 그들이 自由롭고, 풍요롭고 民主참여가 보장되는 韓民族社會의 발전 흐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모든 民族成員이 다같이 民族社會 건설에 同參하여야 하며 또한 福祉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同胞愛가 통일을 熱望하게 하는 것이다.

6) 統一에 미칠 國際環境與件에 대하여서는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第1輯(서울: 書香閣, 1977) 및 第2輯(增補版)(서울: 西江大出版部, 1986)을 참조할 것.

이러한 세 가지 統一의 필요성 중에서 分斷 교통 제거에서 연유한 統一 意慾은 시간이 감에 따라 分斷世代의 퇴진과 함께 약화될 것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계속 統一意志의 源泉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意志도 그 바닥에 南北韓住民間의 同一體認識, 즉 모두가 하나의 民族成員이라는 歸屬感이 전제될 때 가능하며 이러한 생각은 의식적 노력에 의한 敎化 없이는 새 世代에서 自然發生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아뭏든 統一은 統一意志의 存續이라는 與件속에서만 가능해진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2) 理念 및 體制 相應性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武力統一의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統一은 어려워진다. 특히 政治理念과 政治體制가 相克性을 유지하는 동안은 統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統一은 南北韓社會 모두에 있어서 「最上의 價値」가 될 수 없다. 모두 더 좋은 民族社會 건설을 위한 중요한 前提條件으로 통일을 추구할 뿐이다. 韓國은 全韓半島에 걸친 全韓民族成員이 참여하는 自由·民主·福祉 社會를 건설하기 위하여 통일을 추구하며, 北韓 역시 全韓半島에 걸친 社會主義社會 建設을 위해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南北韓은 모두 아무리 통일에 높은 政策比重을 둔다 하더라도 통일을 위해서 한치라도 양보 못할 최소한의 價値·目標·體制特性을 가지게 된다. 韓國의 경우, 통일을 위한다 할지라도 全體主義 秩序를 받아들일 수 없고, 個人自由를 보장하는 體制特性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北韓의 경우도 아무리 統一을 至上의 課題로 삼고 있을지라도 社會主義體制的 기본속성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統一은 南北韓間의 政治理念과 體制가 서로 같지 않을지라도 서로 相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理念·體制 문제에 있어서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은 現存의 理念과 體

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平均의 韓國人」의 價値定向이 문제가 된다. 主權者인 國民의 支配의 價値觀이 바뀌면 政府의 형태도, 公式 이데올로기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⁷⁾ 國民의 價値定向變化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몇십년의 세월 속에서는 바뀌게 된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가하는 것은 이야기하기 어렵다. 政治指導力에 의한 敎化, 社會환경변화의 영향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平和統一은 두 體制사이의 “相克性”이 완화된 상태에서만이 可能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3) 平和定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힘에 의해 강제로 자기 쪽에 복속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동안은 쉽게 統一協商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스스로 양보하면서 타협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戰爭의 공포 속에서 相對方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으며, 不信의 바탕 위에서는 統一을 위한 協力은 不可能해진다. 따라서 平和統一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南北韓間의 平和定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平和定着이란 戰爭可能性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平和는 다음의 조건들 중 한가지 이상이 갖추어질 때 定着하게 된다.

첫째, 서로가 서로의 戰爭企圖를 抑制할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둘째, 平和에 대해 서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合意를 할 것.

셋째, 平和維持를 보장할 實效性 있는 裝置가 설정될 것.

4) 國際環境

南北韓 統一은 東北亞에서 힘을 사용할 능력을 갖춘 強大國의 本質의 利益을 해치는 형태로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強大國의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7) 南北韓社會間의 體制相應性 變化豫測에 대하여는 國土統一院, 「統一基盤造成計劃」(1982)¹⁾참조.

따라서 統一은 國際平和主義의 테두리 속에서만 의미있게 추진될 수 있으며 世界史的 潮流와 호흡을 같이하는 理念을 앞세울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平和롭고 바른 統一韓國을 지향하지 않고는 國際的 支援을 받을 수 없게 되며 國際輿論에서 배척받는 상황에서 통일은 外部勢力의 방해로 성취하기 어렵게 된다. 國際環境과의 조화는 그래서 또 하나의 統一條件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네 가지 統一條件은 최소한의 統一條件이며 이 네 가지 중 어느 한 가지가 결여되어도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南北韓의 統一政策의 現實性을 評價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評價基準이 되게 되는 것이다.

Ⅲ. 南北韓 統一政策의 基本性格

1. 北韓의 프롤레타리아 解放路線

1) 階級解放으로서의 統一

北韓은 主權을 노동자·농민·兵士·근로인텔리에 국한시키고(北韓憲法 제 7 조)『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시하며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관철』하는(同 제 10 조) 階級國家이고,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同 제 4 조) 一黨支配國家이며,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따르는 共產主義 革命政權(同 제 4 조 및 제 3 조)이다. 그리고北韓을 지배하는 「조선로동당」은 그 규약⁸⁾에서 스스로 노동계급의 선봉적·조직적 部隊임을 밝히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완수하고……은 社會의 主體思想化와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면서 프롤레타리아 獨裁, 노동계급의 領導, 階級路線, 「南朝鮮人民」들의 社會民主化 투쟁지원 등등을 다짐하고 있다.

北韓은 그들 스스로가 발간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8) 1980년 10월 제 6차 黨大會에서 改正한 規約.

통일 이론』이라는 책⁹⁾에서 金日成의 말을 인용하여 『조국을 統一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 革命과 反革命 사이의 날카로운 계급투쟁』¹⁰⁾임을 밝히고, 또한 『평화적 통일도 결국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 대중의 이익에 맞는 원칙에서만 가능하다』¹¹⁾고 선언하고 있다.

統一問題에 관한 北韓의 주장과 논리를 정리해 보면 결국 다음과 같다.
 첫째, 金日成 主體思想에 따르는 共產社會를 전국적 범위에서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둘째,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자만이 主權을 행사하는 계급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이 좋은 民族社會를 건설하는 길이고,
 세째, 統一은 南韓의 노동자와 농민을 해방하기 위한 수단이고,
 네째, 北韓에서와 마찬가지로 南韓에서도 노동자·농민혁명으로 인민 정부를 세워 北韓과 合作하여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다섯째, 南韓의 노동자·농민 해방을 돕기 위해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北韓이 추구하는 統一은 民族社會를 하나의 統合된 社會로 만든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南北韓에 걸친 노동자·농민 지배의 프롤레타리아 共產社會 건설에 중점을 둔 特異한 統一이다. 따라서 그들의 統一은 民族社會成員 중 南北韓에 갈라진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統一은 同時에 民族成員을 階級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垂直的 分斷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統一成就 方法

北韓은 그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統一, 즉 「南半部」의 프롤레타리아 階級的 解放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9) 허중호 집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10) 上揭書, p. 186.

11) 上揭書, p. 207.

첫째는 그들이 이른바「平和統一」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南韓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지원하여 南韓에 프롤레타리아 政權이 서게 한 후 이 政權과 타협하여「平和的」으로 통일한다는 방법이고, 둘째는南韓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 反動政權을武力으로 타도하여 제거한다는武力解放의 방법이다.

北韓의 統一은 그 概念에서나 방법에서나 韓國의 現存 政府와 타협하여 추진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그들 論理대로라면 現存의 韓國政府는「鬭爭의 대상인 反動政府」이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北韓이 1960년 이래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른바「聯邦制」는 南北韓의 兩體制 維持를 전제로 南北韓 위에 서는 단일의 中央政府를 세우자는 주장이나,¹²⁾北韓의 統一政策 體系에 비추어 본다면 도저히北韓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戰術的次元에서南韓內에서의「人民民主革命」, 즉 프롤레타리아 階級革命을 촉진할 수 있는 與件造成을 위해「過渡期狀態」로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韓國의「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韓國의 統一政策은 南北韓에 거주하는 韓民族 社會構成員 모두를 思想·階級·地位 일체를 초월하여 하나의 民族成員이라는 共通認識을 토대로 하여 和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 12) 1980년 10월에 있었던「조선로동당」제 6차 당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제 3항에「고려민주연방제」에 대한 소상한 제안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高麗民主聯邦制」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北과 南의 현존의 思想과 制度를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의 두 정부를 地方政府로 하는 하나의「高麗民主聯邦共和國」이라는 중앙정부를 세운다. ②北과 南이 뽑은 동수의 대표와 해외동포를 포함하여 最高民族聯邦會議를 설치하고 통일 民族聯合軍을 장악하게 하며 對外政策을 담당하게 한다. ③ 유엔에 단일국가로 가입한다 등이다. 그리고 이 聯邦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①美軍철수 ②韓國의 反共體制철폐, ③ 현재의 韓國政府를(人民)民主정부로 대체할 것 등의 先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韓國政府의 統一政策은 1982년 1월 22일 大統領 國政演說을 통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1) 民族全體의 統一

韓國政府의 統一政策은 통일의 대상을 전체 民族成員으로 잡고 있다. 『統一은 어느 特定階層이나 集團에 의하여 獨占的·排他的으로 主導되어서는 안되고……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原則에 의거하여 겨레全體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統一主體가 全體民族社會成員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이 주장하는 『人民』계층만의 統一主導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韓國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民主的 節次에 의한 平和統一

韓國政府는 統一이 『겨레 전체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에 의해 성취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民族社會成員 중의 一部集團에 의한 강제적인 지배권 확장으로 統一이 이루어져서는 民族을 위한 統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韓國政府는 또한 統一을 위한다 할지라도 武力 또는 暴力은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民族의 발전을 위해 추구되는 統一이 民族을 殺傷하는 방법으로 추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民族·民主·自由·福祉 保障의 統一

韓國政府는 民族의 自主性이 보장되고, 모든 民族成員의 民主參與와 個人自由가 보장되고, 福祉에 대한 均霑이 이루어지는 統一共和國를 성취한다는 전제에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 22 提議」에서 우리정부는 統一憲法을 만드는 목적을 『民族, 民主, 自由, 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實現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韓國政府는 통일이 아무리 民族的 念願일지라도 결국은 民族社會의 발전의 조건이지 그 자체가 最高 至上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統一을 위한

최대한의 양보 기준을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이다.

統一은 民族自決權을 상실하는 상황에서는 추구할 수 없다. 統一은 民族의 自主性을 희생해서 이루어져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民主參與와 個人自由 保障 그리고 福祉增大는 民族社會 發展目標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목표는 통일을 위한다 하더라도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각오가 大統領 國政演說에서 『民族·自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 實現』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4) 「民族統一協議會議」를 통한 「統一憲法」制定

韓國政府의 統一推進方案은 『雙方 住民의 뜻을 대변하는 南北代表로 가칭 「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統一憲法」을 起草하도록』 하고 「統一憲法」 草案이 마련되면 『雙方은 南北韓 全역에 걸쳐 民主方式에 의한 자유로운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統一憲法」을 확정·공포하고, 그 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統一國家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韓國政府는 남북한의 互惠平等, 內政不干涉, 軍事對峙狀態 解消, 相互交流, 相互連絡代表部 설치 등을 규정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하여 民族生活의 모든 영역에서 統一을 沮害하는 요인들을 착실히 해소하여 民族和合을 실현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韓國의 統一政策의 基本精神은 한마디로 현실을 인정하고 民族社會成員 모두가 다 하나의 統一된 社會內에 포용될 수 있는 단일의 「民族共同體」의 형성을 위해 忍耐力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3. 「民族共同體統一」案

1988년 2월 第6共和國정부가 발족한 직후부터 새로운 統一政策수립 작업이 李洪九 國土統一院長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統一政策은 1989년 4월 현재까지도 公表되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의 基調를 밝히는 大統領宣言과 國土統

一院長官의 관련성명등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基本골격에 있어서 第5共和國의 「民族和合民主統一論」과 큰 차이가 있을것 같지 않다. 다만 몇가지 점에서 훨씬 더 前進의인 姿勢가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것 같다.

1988년 7월 7일에 발표된 大統領特別宣言은 이제 「7.7宣言」이라는 歷史的文件이 되었는데 이 宣言을 통하여 우리 정부는 統一노력의 기본방향을 『南과 北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民族共同體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것』이라 정하고 南과 北이 『하나의 共同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對決을 止揚』하고 交流증대와 상호신뢰 회복을 통하여 민족적유대를 강화하면서 『自主, 平和, 民主, 福祉의 원칙에 입각하여 民族構成員 전체가 참여하는 社會, 文化, 經濟, 政治共同體를 이룩함으로써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6가지 施政方針을 천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各界人士交流 및 海外동포의 자유로운 南北왕래를 위한 門戶개방, ② 離散家族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왕래, 상봉의 적극적 추진, ③ 南北韓간의 交易추진 및 南北間交易의 民族內部交易간주, ④ 南北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民族經濟의 균형적 발전추구 및 友邦國과 北韓간의 非軍事物資交易목인, ⑤ 남북 對決外交 止揚, ⑥ 北韓의 對美對日 관계개선협조 및 對蘇對中 관계개선추구 등이다.

「7.7宣言」의 핵심은 政治統一의 기초가 되는 단일 民族共同體형성추진이라 할 수 있다. 政治는 긴 역사에서 본다면 한 時代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民族은 영원한 것이다. 民族이 하나로 남아있는 한 언제라도 政治統一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政治統一을 추구하면서 民族共同體認識을 깨게되면 統一의 기회는 영영 잃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第6共和國은 「民族共同體統一」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새로운 統一構想의 特異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民族統一優先

세 統一政策의 立案者인 李洪九長官의 「民族統一우선론」이 「民族共同體

統一論」의 기초가 되고 있다. 李長官은 國家와 民族을 구분하고 있으며 民族이 國家보다 서술적차원에서나 규범적차원에서나 한가지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民族이 國家를 형성하는것이지, 國家가 民族의 存立與否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民族은 國家를 형성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다. ……日帝下에서 우리 民族은 生存하였으나 國家는 상실하였다. 國家形態의 상실이 자동적으로 民族의 消滅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民族共同體統一構想」은 바로 이러한 民族우선의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政治統一 이전이라도 北韓住民들을 우리 民族社會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質향상에 우리가 기여하여야하며 또한 南北韓간의 政治統一의 기초가 되는 단일 民族共同體회복에 力點을 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새 統一구상이 형성되고 있다.

2) 人本主義的 接近

民族은 개개의 自然人的 集合이다. 民族統一이라는 抽象的 목표달성을 위해서 民族成員 개개인의 구체적인 自由와 福祉를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人本主義的인, 自由民主主義的인 생각이 새 統一政策의 또 하나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미 「7.7宣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政治統一이전이라도 離散家族再會를 위한 노력, 交易, 北韓住民 생활향상을 위한 제반조치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새 構想의 취지이다.¹⁴⁾

3) 現實主義的 接近

새 統一構想의 바탕에는 강한 現實主義的 생각이 깔려 있다. 北韓共產全體主義政府는 도저히 인정해줄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그 정부와 협조하여야만 民族統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統一以前에도 分斷管理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現存 北韓政府를 忍容하고 그

13) 李相禹編「統一韓國의 摸索」(서울: 博英社, 1987) pp.162~181, 第6章 李洪九,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의 역사적, 이념적 조명”참조.

14) 이러한 생각은 이미 10여년전에 李洪九장관의 「韓國福祉共同體」(The Korean Commonwealth)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위의 논문 참조.

정부가 統一에 협조하도록 하자는 생각이 새 統一構想에 담겨 있다. 北韓政府와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7.7宣言」의 前進的 姿勢가 바로 이런 생각의 반영이다.

새 統一構想에서는 社會共同體, 文化共同體, 經濟共同體등 政治的 反目을 우회하여 이룰수 있는 영역에서의 단일 共同體형성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單一民族共同體의 여러 속성중에서 單一化가 가능한 모든 속성의 統一부터 추진하자는 것도 바로 우리 정부의 현실주의적 접근자세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統一政策의 내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더 이상 논할수가 없으나 기본 發想에 있어서는 既存의 「民族和合民主統一政策」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좀 더 現實主義的이며 좀 더 前進的일 뿐이다.

IV. 南北韓 統一政策의 相異點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統一主體, 統一目標, 統一方法 및 統一祖國의 未來像이라는 네 가지 항목에 걸쳐 對比하여 보기로 한다.

1. 統一主體

北韓은 統一의 主體를 「人民」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텔리로 구성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을 主權을 행사할 수 있는 「人民」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社會構成員은 反動階級으로 분류하여 獨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⁵⁾ 따라서 統一의 主體도 南北韓의 「人民」계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韓國은 그 憲法에서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

1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 제 7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리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헌법 제 10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국중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敎 또는 社會의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文化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의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憲法 제 9 조)라고 명백하게 國民의 平等權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어떤 階級的 특권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國家政策에 國民 모두가 主權者로서 참여할 權利가 보장되듯이(憲法 제 1 조 2 항) 統一政策에도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982년 1월 22일에 발표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도 『統一은 어느 特定階層이나 集團에 의하여 獨占的·排他的으로 主導되어서도 안 되고……겨레 전체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로……성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南北韓 『統一政策은 이와 같이 統一主體의 규정에 있어서 우선 명백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韓民族社會는 어느 特定階層만의 社會가 아니다. 北韓이 統一의 主體를 「人民」 계급에 한정한다는 것은 統一의 이름으로 韓民族社會를 階級에 따라 세로이 垂直的으로 분리하려는 것이므로 民族統一이라고 할 수 없다. 즉 北韓이 주장하는 統一은 “南北韓 프롤레타리아 계급간의 統一,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기타 계급간의 分離”를 뜻하는 것이다. 北韓의 주장은 모든 國民의 平等을 전제로 하는 民主主義原則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명백한 民族分裂의 企圖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2. 統一目標

北韓의 統一의 目標을 『南半部 프롤레타리아 階級解放』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統一問題를 民族解放 문제이며 또한 階級鬭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統一目標은 汎階級的 和合을 통한 「統一民主共和國」 건설에 두고 있다. 韓國은 民族의 生活空間의 統合과 民族社會의 單一化를 이루어 民族內部에서의 對立鬭爭을 止揚하고 모든 國民이 다함께 민족사회 발전에 참여하게 하며, 또한 발전의 성과를 다함께 누리게 하자는 데에 統一

의 목표를 두고 있다.

統一目標을 두고 본다면 北韓의 政策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단의 統一이라는 部分統一이며 階級鬭爭을 추구하는 民族分裂政策이고, 韓國의 統一政策만이 진정한 뜻에서의 民族統一이다. 理念·身分을 가리지 않고 모든 民族成員간의 共存과 和合을 목표로 統一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전체 民族統一이 되기 때문이다.

3. 統一方法

공식적으로 南北韓 모두 武力統一을 統一의 方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南半部 人民의 革命鬭爭을 武力을 포함하여 모든 方法으로 지원하겠다』는 留保를 하고 있어 사실상 武力統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北韓의 公式統一方案은 「南半部」에서 「人民民主革命」이 완성되어 「人民政府」가 들어선 후, 이 「人民政府」와 협의하여 平和的으로 單一政府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北韓이 선전차원에서 내세우는 「聯邦制」는 「南半部」에서의 「人民民主革命」을 지원하는 與件造成을 노린 戰術的인 제안에 불과하며 진정한 統一方案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韓國의 統一方案은 한편으로는 南北 쌍방이 合意할 수 있고 동시에 南北韓 전체 주민의 다수가 지지할 수 있는 「統一憲法」의 制定과 이에 의거한 總選舉 실시에 의한 統一國家 실현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 체결에 의한 南北韓關係 正常化를 통한 상호 緊張緩和과 신뢰조성 등 關係改善으로,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면서 「統一憲法」 制定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北韓의 統一方案은 그들이 추구하는 階級革命을 韓國이 받아들인다는 강요에 지나지 않으며 처음부터 眞摯性이 없는 方案이다. 이에 비해 韓國의 統一方案은 진정한 뜻에서의 民族統一을 주어진 현실 속에서 平和的으로

로 달성하려는 현실주의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統一祖國의 未來像

北韓이 統一을 성취한 후 이루고자 하는 祖國의 未來像은 근로대중이 지배하는 「人民民主獨裁」의 共產主義國家이다. 이에 비해 韓國의 統一된 祖國의 未來像은 自主權이 확보되고 모든 국민이 自由를 누리며 모든 國民에게 民主參與가 보장되고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이 보장되는 自由·民主·福祉社會이다.

韓國과 北韓은 서로 다른 祖國의 未來像을 제시하고 韓民族社會成員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北韓은 蘇聯·中共·越南 등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농민이고 少數의 비근로 계층의 착취를 받던 나라에서 피압박 대중의 革命意志를 앞세워 政權 탈취에 성공한 데에 주목하면서 日帝下에서 해방된 지 40년이 되는 현재까지 韓國人의 노예상태를 그대로 想定하고 時代錯誤의인 노동자·농민 解放鬭爭을 벌이고 있다. 北韓은 韓國이 이미 階級이 없어지고 모든 社會構成員이 모두 自由市民으로 균등한 기회 속에서 각기 自己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는 自由로운 社會인데도 美國을 「統治者」를 擬制하면서 근로계층의 해방을 앞세워 階級鬭爭을 통일 목표에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韓國과 北韓社會 내에서는 無產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專門技術職 종사자와 賃金 노동자 등 스스로 中產層을 자처하는 계층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韓國의 汎階層的인 民族和合 노력은 점차로 더 넓은 지지를 받아가고 있으며 北韓의 新階級社會는 이미 時代逆行的인 것으로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韓國은 自信을 가지고 民主節次에 따라 國民投票로 두 體制에 대한 거래의 지지를 가리자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 北韓은 南韓內의 특정계층의 국민만 統一協商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구차스러운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은 大勢의 흐름의 逆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의 統一政策은, 두 政府가 그 동안 내세워 온 理論과 提案·聲明이 많았지만, 그 핵심에서는 위와 같은 네 가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네 가지 차이점은 南北韓 社會의 基本性格을 반영하는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統一을 위한 對話를 어렵게 만드는 基本原因이 되기도 한다.

V. 南北韓統一政策의 評價

第4節에서 추출해 낸 南北韓統一政策의 핵심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몇 가지 視角에서 평가해 보기로 한다.

1. 部分統一과 全體統一의 問題

北韓은 統一의 主體를 無產 근로대중에 한정시키며 統一努力을 階級鬭爭으로, 그리고 統一祖國의 理想像을 프롤레타리아 階級獨裁의 共產全體主義 國家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韓國은 汎階層的인 理念과 身分을 떠난 모든 民族成員의 同等參與를 統一과 統一 이후의 民族社會 建設 指針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部分統一」과 韓國의 「全體統一」의 차이는 統一對話를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部分統一論과 全體統一論은 각각 階級的 社會觀과 自由民主主義의 社會觀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世界觀·價值觀에서 나온 것이다.

北韓政策의 근간을 이루는 階級的 視角은 물론 마르크스主義者들의 전통적인 것이다. 이 시각은 사회현상을 모두 階級間的 對立鬭爭에서 풀이하려는 시각으로 中世 封建社會와 初期 産業化社會에서 生産手段을 獨占한 領主 및 資本家階層과 이를 갖지 못한 근로계층간의 침예화된 대립을 혁명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자극을 준 社會認識 論理로 작용했었다. 마르크스(Karl Marx, 1818~83)는 生産手段의 所有를 중심으로 한 有產者와 無產者의 生産關係가 階級을 낳고 有產者階級的 無產者階級 착취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無產者의 비참한 생활조건이 그들의 革命

的 階級意識을 낳아 革命을 통한 階級解放을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에 의한 인간착취가 없는 理想社會를 만들기 위해 生産手段의 共有를 중심으로 한 共產主義體制를 제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人間社會의 階級이 生産手段 有無로만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59) 이래, 베버(Max Weber, 1864~1920) 등 여러 학자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졌다.¹⁶⁾ 인간은 物質的 利害 앞에서는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階級으로 集團活動을 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人間은 富의 획득 이외에 權力과 명예에 의한 地位 획득에서도 成就動機를 갖게 되므로 社會는 반드시 富의 分配만으로 階級化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共產革命 體制에서는 富의 分配를 향한 경쟁을 財産의 共有化로 제도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은 대신에 權力으로 位階的 支配秩序를 구축하여 새로운 형태의 階級社會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蘇聯도 이러한 새로운 階級社會이며 北韓도 마찬가지다. 특히 北韓의 경우는 身分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묶는 철저한 階級社會를 만들고 있다.

共產革命은 富의 分配에 불만을 가진 多數를 동원하여 既存 支配體制를 파괴한 후 權力의 差等分配를 통하여 새로운 階級社會로 전환시킨 결과를 가져온 인위적인 奪權鬭爭이다. 그리고 이러한 奪權鬭爭은 富의 分配에 불만을 가진 多數가 존재했던 封建體制, 植民體制, 初期 資本主義體制에서는 유효한 戰術이 될 수 있었다. 北韓은 日本 植民地 支配下의 韓國社會의 특성을 이용하여 노동자·농민 중심의 집단적 奪權鬭爭을 전개해 왔고 韓國의 급속한 産業化 과정에서 생길 것이라고 기대되는 소외된 근로계층의 불만을 이용하여 韓國內에서의 共產革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戰

16) 社會構造內에서의 不平等과 階級形成에 대한 가장 간결한 理論比較로는 다음 글을 볼 것. Reinhard Bendix, "Inequality and Social Structure: A Comparison of Marx and Web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9 (April 1974), pp. 149~161.

術의 배려에서 근로계층 獨裁의 「部分統一論」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韓國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으로 표현되는 全體統一論은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에서 나오는 自然스러운 統一論議이다. 西歐政治史에서는 이미 프랑스革命(1789)을 계기로 身分을 떠난 萬民平等思想이 지배적인 政治價値로 정착되었고 美國의 獨立(1776)과 그 후 200년간의 발전으로 萬民平等思想의 政治理念이 社會構成員의 普遍的 支持를 받는 政治價値임을 實證의으로 보여 주었다. 모든 인간의 平等思想은 개인의 基本權을 天賦의 것으로 간주하며 個人自由의 保障과 民主參與를 양보할 수 없는 權利로 인정하는 自由民主主義 政治理念으로 結晶을 이루었다.

韓國의 自由民主主義는 階級을 인정하지 않고 身分에 의한 個人的 特權을 인정하지 않으며, 財産에 의한 人間差別을 금하고 있다. 또한 모든 社會構成員의 主權者로서의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統一論議에서도 모든 國民의 意思가 반영되는,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동등의 참여권을 가지는 全體民族의 和合을 전제로 한 統一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南北韓間의 統一論 對決은 階級意識을 가진 少數와 全體民族社會와의 대결이 된다. 이 대결은 單一集團 利益을 추구하는 단결된 계급과 그 계급까지 포용하여야 하는 非組織的 全體와의 싸움이므로 戰術面에서는 北韓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나 正當性이라는 면에서는 韓國의 입장이 더 說得力을 가지며 폭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南北韓 社會變化 認識의 差

1945년의 韓國社會는 産業化 이전 단계의 貧寒한 植民地였다. 人口의 80% 이상이 농민이었고, 地主다운 地主도 없었고, 教育水準도 아주 낮고, 所得水準은 세계 最下位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그 후 南北韓社會는 다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産業化를 이룩하여 이미 開發途上國의 先頭에 서게 되었다.¹⁷⁾

17) 南北韓社會 變動에 대하여는 李相禹, “政治理念, 社會變化와 對南政策” 韓國

北韓은 이러한 급격한 社會變化와 관련하여 韓國社會에는 「소외된 근로 계급」의 확대와 그들의 革命意識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統一 노력을 이들에 의한 「人民民主革命」 고취에 집중시키고 있다.

韓國은 産業化에 의한 社會構成 변화와 이에 따른 國民意識 변화에 주목하면서 北韓社會의 産業化가 덜 혁명적인 「中産層 意識」을 가진 階層의 확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北韓의 새로운 世代가 더 合理的인 政治認識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더 合理的인 統一政策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¹⁸⁾

南北韓社會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産業化와 이에 따르는 社會構造 변화 및 意識 변화 이외에도 外部世界의 潮流에 의한 意識 변화, 世代交替에 의한 過去 認識에 대한 변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北韓의 統一政策과 韓國의 統一政策의 成就與件을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다.

南北韓社會 변화가 어느 쪽의 政策與件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相反되고 있는 동안은 의미 있는 統一協議는 시작될 수 없다. 北韓이 歷史變化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적어도 事實 認識에서 韓國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될 때라야 진지한 南北韓間의 對話는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國際環境變化 認識의 差

北韓은 全世界的 차원에서 社會主義 革命勢力이 강화되고 있으며 美國을 비롯한 自由民主 세력이 쇠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美國領導力の 弱화, 西方世界內의 內紛, 제 3 세계에서의 社會主義 革命의 확대 등에서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東北亞에서의 세력균형에서 美國이 獨占의 支配權을 가졌던 지위에서 서서히 蘇聯과 대등한 지위로 내려서고 있

共產圈研究協議會 研究論叢(第2輯), 金俊煥·스칼라피노 共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서울: 法文社, 1982)를 참조할 것.

18) 國土統一院, 「統一基盤 造成計劃」(1982) 참조.

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國際環境變化 인식에서 北韓은 美國勢力을 韓半島에서 축출하여 韓國을 孤立시키면 그들의 계획대로 「南半部革命」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韓國은 世界史的 潮流가 反全體主義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階級獨裁의 共產全體主義는 이미 共產圈 內部에서도 심각한 반대에 봉착하여 自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믿고 있다.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中共의 鄧小平改革政治 등은 그 徵候라고 보고 있다.

제 3 세계에서의 社會主義 革命은 產業化가 가져온 資本主義의 모순을 제거하고 근로자를 해방한다는 共產革命이 아니라 產業化 이전 단계에서 產業化를 추구하기 위한 社會力量 집중 목표의 革命으로서 결코 共產全體主義理念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美國의 領導力 弱化는 世界秩序의 民主化, 弱小國의 自主權 增大, 國家間平等의 진척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個人自由의 확대, 民主化 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潮流로서 韓國의 政治理念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南北韓間의 國際環境에 대한 認識差가 南北韓間의 現實의인 統一協議를 방해하고 있다. 서로가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믿는 한 서둘러 타협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4. 認識差의 解消와 統一可能性

南北韓은 아직도 統一論議의 의미 있는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가 相反되는 目標과 方案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最底線을 지키려 하고 있는 한, 妥協에 의한 協商 진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南北韓이 모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고수하려 하는 밑바탕에는 國內外情勢變化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기 목표달성에 유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한, 어느 쪽도 쉽게 양

보하려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統一의 與件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南北韓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差가 계속 남아 있더라도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바르고 또한 우리의 信念이 옳다고 확신하고 北韓이 인식을 고쳐가지고 合理性을 되찾아 진지한 태도로 統一協商에 응해 올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認識과 信念은 北韓에서처럼 教條的으로 注入된 先入的 틀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고 開放된 社會體制內에서 自由로운 意思交換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보았고 옳은 信念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統一의 可能性은 歷史의 흐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다. 歷史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결코 바른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의 統一與件이 언젠가는 조성되리라 확신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부단히 우리의 信念을 가다듬고 우리의 體制가 진정으로 우리 民族 발전에 기여하는 體制임을 實績을 통하여 立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